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제1장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I. 예산안 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302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665억 5천 6백만원 대비 363억 5천 5백만원(△54.6%) 감소하였음.
- 지방세 수입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62억 7천 2백만원, 보조금은 226억 4천 3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억 8천 5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2022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2예산(안)	2021최종예산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0,201	66,556	△36,355	△54.6

일 반 회 계	세외수입	6,272	6,136	136	2.2
	경상적 세외수입	927	876	51	5.8
	임시적 세외수입	5,195	5,098	97	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9	162	△13	△8.0
	보조금	22,643	59,942	△37,299	△62.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85	479	806	168.3

○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상암소셜박스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 1천 6백만원,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7억 9백만원, 민간 위탁금 정산이자 등 ‘이자수입’ 2억 2백만원을 합한 9억 2천 7백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반환액 등 ‘보조금반환수입’ 43억 3천 9백만원,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사업등 정산잔액 등 ‘기타수입’ 1억 9천 2백만원,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등 ‘지난년도수입’ 6억 6천 5백만원을 합한 51억 9천 5백만원임.
- 2021년 신설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¹⁾은 방문판매법 위반 등 ‘과태료’ 1억 4천 9백만원임.
- 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등 ‘국고보조금’ 26억

1)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220)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분리·신설되었음.

8천 2백만원,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사업 등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23억 5천 7백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립) 등 ‘기금’ 2) 76억 5백만원을 합한 226억 4천 3백만원임.

- 이 밖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국고보조금 등 ‘전년도이월금’ 12억 8천 5백만원임.

<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부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증감	주요 내역	
일반회계(계)		66,556	30,201	△36,355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6,136	6,272	136		
	경상적	소계	876	927	51	
		재산임대수입	46	16	△30	- 상암소셜박스 임대료 16
		사용료수입	703	709	7	- 노동허브 사용료 6 -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704
		이자수입	127	202	75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이자수입 12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등 이자수입 70 - (플랫폼)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91 - (공정)보조금, 민간위탁금 정산 이자 수입 6 - (사경)기타이자수입 21
		소계	5,098	5,195	98	
	임시적	보조금반환수입	2,316	4,339	2,023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반환액 481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32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집행잔액 247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9 - 자치구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628 - (노동)민간위탁금 및 민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24 - 자체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95 -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지원 사업 집행잔액 369 - (공정)민간위탁금 및 민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8 - (사경)위탁사업비 및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228
		기타수입	1,835	192	△1,643	- (노동)기타잡수입 22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사업등 정산잔액 170
		지난연도수입	946	665	△282	- 한국노총 보조금 반납금 상환 35 -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등 지난연도 수입 339 -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등 145 - (사경)전년도 이전 미수납액 14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	149	△13	-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15 - 방문판매업 위반 과태료 96 -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38
	보 국 소계	59,942	22,643	△37,298		

2) 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조인	예	국고보조금 등	33,423	2,682	△30,742	- 지역노사민정 협력 지원 20 -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30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2,129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502
		국기균형발전특별회계	9,368	12,357	2,989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사업 5,600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4,793 - 마을기업육성 35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614
		기금	17,151	7,605	△9,545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건립) 5,228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60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이용보조) 170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5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79	1,285	807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8 - 소비생활센터 운영 집행잔액 7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51

나. 세출예산안

(1) 총괄

-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2,496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4,675억 1천 2백만원 대비 46.6%(△2,179억 3백만원) 감액되었음.

< 2022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예산(안)	2021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249,609	467,512	△217,903	△46.6	
일반회계	계	239,588	454,372	△214,784	△47.3
	행정운영경비	442	458	△16	△3.5
	재무활동	34,476	52,377	△17,901	△34.2
	사업비	204,670	401,536	△196,866	△49.0
도시개발특별회계	계	10,021	13,140	△3,119	△23.7
	사업비	10,021	13,140	△3,119	△23.7

-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 재무활동비 등을 포함해 2,395억 8천 8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비로만 100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의 사업비는 2,046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968억 6천 6백만원(△49.0%)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 4천 2백만원으로 1천 6백만원(△3.5%)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344억 7천 6백만원으로 179억 1백만원(△34.2%) 감액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업비는 전년대비 31억 1천 9백만원(△23.7%) 감액되었음.

(2)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정책사업 총 6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 72개로 구성되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노동존중문화 정착】	265억 5천 1백만원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65억 8천 8백만원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51억 3천 3백만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28억 9천 2백만원
-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		26억 5천만원
-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24억 3천 7백만원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15억 4천 6백만원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13억 7천 4백만원
- 전태일기념관 운영 13억 4천 1백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1,254억 7천만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574억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사업) 118억 2천 7백만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81억 1천 8백만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73억 1천 9백만원
- 생활상권 활성화 68억 7천 5백만원
-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64억 6천 9백만원
-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신규) 62억 2천 2백만원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28억 3천 9백만원
-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도시개발특별회계) 24억 5천 2백만원
-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신규) 24억 1천만원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1억 4천만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365억 1천 4백만원

- 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224억 6천만원
-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113억 1천만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6억 8천 4백만원
-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4억 1천만원

-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4억원
-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프라 보급 지원 2억 5천만원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17억 1천 4백만원

-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6억 3천 6백만원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5억원
-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2억 5천 8백만원
- 서울형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2억 9천 5백만원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24억 4천 1백만원

-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8억 6천 9백만원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5억 2천만원
-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3억 9천만원
-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2억 9천 1백만원
- 공산품 안전관리 및 불법 공산품 단속 강화 2억 5백만원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220억 2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63억 9천 1백만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1억 6천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30억 4천 2백만원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1억 5천 2백만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14억 4천 8백만원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7억 8천 5백만원
-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7억 5천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7억 1천 8백만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5억 4천 6백만원
- 마을기업 육성 5억 2천 5백만원
-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5억 1천 1백만원

(3) 성과계획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2022년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6개, 성과지표 10개를 설정하고, 2,496억 9백만원을 편성함.

< 2022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성과계획 총괄 >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노동·공정· 상생정책관	1	6	10	13	249,609	212,592	37,017

< 2022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성과계획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예산액
노동이 존중 되고 상생 협력하는 공정도 시 정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수준 제고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 정착	산업안전가이드라인 배포 부수	26,551
		공공부문 노동교육 수료인원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이용 만족도	125,470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예산액
		전통시장 상인 사업효과성 인식도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간편결제 활성화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프라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36,514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합의성립 건수	1,714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상담결과 피해구제율	2,441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협동조합 지원정책 만족도	22,002

(4) 성인지예산

-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477억 4천 4백만원 대비 35.9% (△171억 4천 8백만원) 감소한 305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했음.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성별 균형잡힌 일자리, 노동, 사회적경제 분야 중심으로 12개를 설정했으며, 이중 성별영향평가사업은 7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5개임³⁾.

< 2022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성인지예산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계	30,595	47,744	△17,148	△35.9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6,588	9,330	△2,742	△29.4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2,892	3,830	△938	△24.5

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기본계획을 토대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연단위 사업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지정사업은 없음.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1,374	1,593	△219	△13.8
노동존중문화 확산	309	454	△145	△31.9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168	753	△585	△77.7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8,118	10,505	△2,386	△22.7
서울형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295	393	△98	△24.9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291	328	△37	△11.2
사회적경제마켓 추진	224	335	△111	△33.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160	6,185	△3,026	△48.9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785	1,116	△330	△29.6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6,391	12,922	△6,531	△50.6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가. 2022년도 신규사업

- 2021년도 최종예산 대비 신설된 사업은 6개 사업, 94억 1천 2백만원임.
 - 사업별로 살펴보면, ▶서울형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 1억 5천만원,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24억 1천만원,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62억 2천 2백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2억 8천만원, ▶전통시장 홍보 에코백 지원 2억원,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연구용역 1억 5천만원이 각각 신설되었음.

< 2022년도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사유
합 계	9,412	
서울형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 (청년자율예산)	150	서울시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형 표준 산업안전수칙 개발 및 발간비용, 홍보비 신규 추가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2,410	인턴십 및 실무 위주의 창업교육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 양성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6,222	로컬콘텐츠를 보유한 골목상권을 상권기반으로 종합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280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전통시장 홍보 에코백 지원	200	시민참여예산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연구용역	150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연구용역 신규 추진

나. 2021년도 완료사업

- 2021년도 완료사업은 17개 사업, 80억 2백만원으로, 청년자율예산 1개 사업, 시민참여예산 2개 사업, 단년도 사업 2개 사업, 사업목적 달성 2개 사업 등임.

< 2021년도 완료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1년 최종예산	감액사유
합계	8,002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6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시네트워크 구성 곤란하여 사업재개 가능 여부 분석 후 필요시 중장기적 추진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216	청년자율예산(단년도사업)
코로나19 인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지원 인식민족도 조사	20	단년도사업
서울 푸드트럭 거리 조성	116	자치구 수요 저조 및 코로나 확산 고려
중소기업 직합업종 보호 활성화	112	동반성장위원회 추진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1년 최종예산	감액사유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3,770	2018~2020년까지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추진 완료했으나 2021년에 한시적으로 추가사업 추진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 증대 SNS홍보 프로젝트'	400	시민참여예산(단년도사업)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76	코로나19로 '시민시장위크' 등 행사 개최 지양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지원	200	서울상인연합회 보조사업으로 변경 추진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뚝다 노래방!)	344	시민참여예산(단년도사업)
전통시장 경영여방시스템 구축	1,000	단년도 사업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489	- 법령개정으로 상가임대료 차임 등 증액청구 상한 조정(9%→5%) - 코로나19로 변화한 상권임대차 시장 여건에 따른 신규지정 보류 - 기지정 상가(159개) 약정이행상황 관리·점검수당을 타사업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으로 이관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110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종료(2018.11.~2021.12.)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200	사업목적(12개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달성
사회적경제조직활성화 공간지원	600	사업목적(25개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관) 달성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100	공모심사 실시 후 교부액 결정
국고보조금 반환	189	2022년 추경 편성 예정

3. 주요 증·감액 사업

가. 증액사업

- 2022년도 세출예산 중 전년대비 15% 이상 증액된 사업은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17개 사업이며,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증액사업 현황(15% 이상)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가사유
				증 감	비율(%)	
1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134	417	283	211	- 폐원 어린이집 공간 폐기물 처리 및 공사비 신규반영 - 재취업아카데미 신규운영
2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127	771	644	507	이전 복지관 관리비, 노동복지프로그램 사업비 등 증가
3	서울시 축탁직 노동자후생복지 지원	4	54	50	1,261	축탁직 일반휴양시설 이용료 및 문화바우처 신설
4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467	669	201	43.0	지원기간 확대(5년)
5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1,860	57,400	45,540	384.0	안정적 보증공급
6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건립)	1,525	7,319	5,794	379.8	중기부 공모
7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이용보조)	135	216	81	59.5	중기부 공모
8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178	300	122	68.5	중기부 공모
9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555	827	272	49.0	중기부 공모
10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124	2,140	1,015	90.3	중기부 공모
11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115	11,310	11,945	10,342	서울 전역의 소상공인 매장 에서 사용이 가능한 광역 상품권 신규 발행
12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300	400	100	33.3	소상공인 모집 증가 및 공공마켓 콜센터 인건비 상승
13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191	258	67	35.2	공정거래지원센터 및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지원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14	공정경제위원회 운영	5	12	7	140.0	조례 신설에 따른 공정경제위원회 신규 구성·발족 및 회의개최
15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449	636	187	41.6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범위 확대 및 표본 추가로 인한 용역비 증가 등
16	공정경제 포럼 개최	5	12	7	140.0	공정경제위원회 발족식 및 포럼(토론회) 개최
17	공산품 안전관리 및 불법 공산품 단속 강화	144	205	61	42.4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요구사항 증대에 따른 지원 확대 필요

나. 감액사업

- 세출예산 중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15% 이상 감액된 사업은

▶ 사회투자기금 전출, ▶ 사회성과보상활성화 지원,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 골목형 상점가 지원 등 36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감액사업 현황(15% 이상)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9,330	6,588	△2,742	△29.3	사업운영 효율화를 조정
2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3,830	2,892	△938	△24.5	사업운영 효율화를 조정
3	전태일기념관 운영	1,579	1,341	△237	△15.0	전태일거리 조성사업 종료, 기념관 홍보사업 축소
4	노동존중문화 확산	454	309	△145	△31.9	- 노동권리안내서 청소년 노동 교육 교재활용에 따른 수요 증가 반영 - ‘노동존중특별시 홍보’ 예산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사업으로 편성 - 국외업무여비감액
5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96	44	△52	△54.0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홍보’ 예산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사업으로 편성
6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753	168	△585	△78.0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 사업 '22년으로 명시이월(250백만원)하여 추진하므로 '22년에는 미편성
7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2,132	1,546	△586	△27.0	- 공모사업 전액 미편성(중복 지원, 단발성 행사 위주 지원금 사용 등) - 민주노총 지원 의사 없음을 확인하여 지원 중단 - 한국 노총 서울지역 본부지원 일부 감액
8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애장 운영	1,904	1,479	△425	△22.3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른 사업비 조정
9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2,425	1,022	△1,403	△57.9	특화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및 자치구 지원금 조정
1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전환사업)	16,835	11,826	△5,009	△29.8	사업 규모 조정
11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1,810	570	△1,240	△68.5	전기안전공사 의무점검에 따른 관련예산 감액
12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1,783	582	△1,200	△67.3	지역성장 사업 종료 및 홍보비 감액
13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2,139	810	△1,329	△62.1	코로나 확산 고려 사업 조정
14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630	534	△96	△15.2	인왕시장 배송센터 리모델링 사업 완료 및 차량교체 수요 반영
15	골목형상점가 지원	2,500	300	△2,200	△88.0	2021년 신규지정 상점가수 고려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16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프라 보급 지원	1,800	250	△1,550	△86.1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프라 보급률 반영
17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1,022	410	△612	△60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율 반영
18	서울형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393	295	△98	△24.9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성과 등 자체평가 실시로 설문조사 예산 감액 및 참여업체 수 조정 등
19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31	21	△9	△30.5	자치구 대부업 직무교육 실시 횟수 감소 등
20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57	35	△22	△38.6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례비 감액 및 학교소비자교육 조정 반영 등
21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210	48	△162	△77.1	-홍보 내실화 추진으로 홍보비 감액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현황 반영 하여 감액
22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1,295	446	△849	△65.6	공동주택단지 지원규모 축소 (18개소→6개소)
2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610	260	△350	△57.4	혁신성을 가진 사기업 발굴 어려움으로 인한 감액
24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461	243	△218	△47.3	자치구 지원사업과 중복사업 축소 및 규모 조정
25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892	750	△141	△15.9	2021년 국제협력 연구 용역 종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감소, 대륙별 정책대화 사업비 감소
26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335	11	△324	△96.8	행사 비용 축소
2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6,185	3,160	△3,026	△48.9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용역 사업 축소 등
28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2,952	1,448	△1,504	△50.9	자치구별 통합지원사업 연차 변동에 따른 지원금액 조정
29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1,141	511	△630	△55.2	효율적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조정
30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1,115	785	△330	△29.6	-중복사업 통합, 사업 축소 -세계협동조합대회 완료
31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12,922	6,390	△6,531	△50.5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기업경영 악화로 인한 기업의 고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 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일부 감액
32	사회적경제기업 관리	145	117	△28	△19.2	심사, 교육 횟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 조정
33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816	546	△270	△33.1	사업추진방식 변경(민간위탁→민간경상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일부 감액
34	마을기업 육성	652	525	△127	△19.5	행정안전부 가내시 내역에 따라 국·시비 매칭금액 감액
35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210	2	△208	△99.0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 종료로 공공운영비 전액 감액
36	사회투자기금 전출	7,000	-	△7,000	△100.0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을 통해 120억 규모의 기금 운용이 가능하여 미편성

II.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세입

가. 국고보조금 세입의 축소

- 국고보조금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세입의 74.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나 2022년 국고보조금 세입은 전년대비 62.2%(△372억 9천 8백만원) 감액되었음.
- 주요 감액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이 대폭 축소(△77.4%)됨에 따라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서 249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영 악화로 기업의 인건비 지원 수요가 감소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에서 23억 8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이 밖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마을기업 육성’ 등 16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에 비해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의 재정여건상 정부지원 없이는 투자재원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고보조금 매칭기준으로 인해 정부지원의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현행 국고보조금 매칭기준의 역진성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꾸준히 건의할 필요가 있음.

2. 세출

가. 주요 특징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2022년 예산안은 2,496억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4,675억원)에 비해 46.6% 대폭 감액되었으나, 본예산(2,126억원)과 비교하면 17.4% 증액되었음.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예산안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7%로, 전년도 최종예산 1.03%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음.

- 올해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당초예산 대비 2,544억원 (119.9%)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2년 (안)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서울시	일반회계	22,466,451	25,269,572	24,168,334	26,853,339	26,902,032	32,528,018	27,725,767	33,352,123	31,228,081
	특별회계	9,347,614	10,512,120	11,573,274	11,964,528	12,626,205	12,476,821	12,430,475	13,129,148	12,846,767
	합계	31,814,065	35,781,693	35,741,608	38,822,867	26,902,032	45,004,840	40,156,242	46,481,271	44,074,84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일반회계	124,548	145,460	158,243	196,549	204,166	711,736	199,452	454,372	239,588
	특별회계	-	-	-	-	10,027	8,967	13,140	13,140	10,021
	합계	124,548	145,460	158,243	196,549	214,193	711,736	212,592	476,512	249,609
비율 (%)	일반회계	0.55	0.58	0.65	0.73	0.76	2.19	0.72	1.36	0.77
	특별회계	-	-	-	-	0.08	0.07	0.11	0.1	0.08
	합계	0.39	0.41	0.44	0.51	0.54	1.58	0.53	1.03	0.57

- 일반회계는 전년 최종예산보다 0.59% 포인트 낮아졌으며, 특별회계도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서 일부 세부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지고,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의 설계공모 완료 등으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사업비가 감액되면서 전년대비 0.02% 포인트 감소하였음.
-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코로나19 충격 최소화와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회복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을 대폭 증액했음.
- 둘째,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의 실행을 위해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과 청년 골목창업 프로젝트 사업이 신설되었음.
- 셋째, 사용지역제한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광역단위 서울 사랑상품권을 신규 발행하고, 상품권 구매와 결제방법을 다양화하여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도모하였음.
- 넷째,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위탁기관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어 해당 위탁기관 직원의 고용안정과 위탁사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개선 필요

-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와 해당 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는 해당 부서를 대표하거나 포괄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설정되어야 하고, 사업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되어야 함⁴⁾.

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2017.9.11.)

○ 그러나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2022년 성과지표와 전년도 성과지표를 비교하면 전략목표와 일부 정책사업목표가 변경되고, 성과지표도 12개에서 10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지표 중 ‘민생업소 점검시행 및 조치율’ 과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이 삭제되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수’ 가 ‘공공부문 노동교육 수료인원’ 으로 변경되었음.

< 전년대비 성과지표 변동 현황 >

2021			2022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노동이 존중되고 평안한 경제민 주화 도시	노동자 복지수준 제고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수 산업안전가이드라인 배포 수 공공부문 노동교육 수료인원	노동이 존중되고 상생협력하는 공정 도시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수준 제고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산업안전가이드라인 배포 수 공공부문 노동교육 수료인원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이용만족도 전통시장 상인 사업효과성 인식도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이용만족도 전통시장 상인 사업효과성 인식도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상가임대차분쟁센터 상담 건수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간편결제 활성화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프라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상담결과 피해 구제율 민생업소 점검시행 및 조치율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합의성립건수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협동조합지원정책 만족도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상담결과 피해 구제율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및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제로페이 가맹점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액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협동조합 지원정책 만족도

○ 행정환경이나 정책적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성과지표의 변동은 가능하나 행정의 지속성과 성과평가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연도별 성과지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설정해서는 안됨.
-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 사업 효과성 인식도 (87.65%)와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프라 보급 및 이용활성화 (2조 5천억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8천 억원)은 2020년도 및 금년도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사업예산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성인지예산 >

구분	2022년 목표	2021 실적(10월 현재)	2020 실적
전통시장 상인 사업효과성 만족도(%)	87.65	89.30	91.05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프라 보급 및 이용 활성화(억원)	25,000	28,400	7,978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억원)	8,000	8,400	5,506

다. 노동환경개선 성인지예산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중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은 유해 위험 사업장,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안전권 향상을 위해 선정됐었으며 성과지표는 ‘산업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부수’임.

<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성인지예산 >

성과목표(성과지표)	2020년 실적	2021년 추정치	2022년 목표치
산업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부수	3,000부수	10,000부수	15,000부수

- 팸플릿, 교육책자 등의 단순배포는 예산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반영해 사업예산의 성평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평가라 보기 어려우며, 사업예산 투입에 따른 성별 효과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음.
- 또한, 코로나19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간호, 돌봄,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의 질병과 재해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중공업분야에 맞춰진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 보건조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에 적합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이 요구됨.

라.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비 편성 부적절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2022년 민간위탁사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해 총 14개 사업이며, 313억 4천 2백만원이 편성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022년 민간위탁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안	21년 최종예산
1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417,060	134,233
2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771,369	127,000
3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6,587,927	9,329,748
4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2,892,000	4,029,952
5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1,373,783	1,593,146
6	전태일기념관 운영	1,341,160	1,578,662
7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8,118,437	11,710,344
8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1,478,898	1,903,606
9	서울품물시장 활성화	2,839,542	3,237,621
10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519,778	513,218
1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159,750	6,185,415
12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511,428	1,141,451
1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785,250	1,115,500
14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545,620	815,723
소계(14개)		31,342,002	43,415,619

- 민간위탁금은 민간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에 편성되며 법령에 명확한 위탁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해야함.
- 서울시는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의 예산집행 및 회계의 명확성·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인건비에 국민건강보험 등 5대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업 원가계산서의 구성요소 >

가) 인건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총당금

- (1) 기본급(급여) : 법인, 사무(시설) 임 직원에 대한 기본 월 임금
- (2) 제수당 : 임 직원에 대한 제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기타 수당(직종 직급별 등 정역으로 지급하는 수당)
- (3) 상여금 : 임 직원에 대한 업무 성과나 공헌도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4) 퇴직총당금 : 직원의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총당금
- (5) 보험료 :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부담금 및 근거법령에 의한 보험 등

나) 운영비

- (1)여비(국내/국외) (2)교육훈련비 (3)임차료 (4)우편통신료 (5)유인물비 (6)소모품비 (7)차량유지비
- (8)공공요금 및 제세 (9)기타경비*
- *기타 경비 : 계약 목적물을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한함
- 다) 사업비(공사, 용역, 물품구매, 프로그램, 교육, 행사 등)
- 라) 위탁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합계

※ '이윤'은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계상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업체는 제외

※ 출처 :서울시 민간위탁 계약심사 매뉴얼

-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3년 센터 개소 이후부터 현재 까지 직원 인건비에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고, 센터 운영비에 포함해 운영 중임.

< 2022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내역 >

(단위 : 원)

구	분	2021년 확정예산	2022년 추정예산	비 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205,292,030	164,013,690	사회보험료 0.9% 인상분 반영
	사회보험금	122,691,570	133,733,190	
	여비	22,116,400	18,135,120	
	업무추진비	9,900,000	8,118,000	
총계		360,000,000	324,000,000	

- 또한, ‘서울노동권익센터’ 도 올해까지 보험료를 운영비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 에 따라 이를 인건비로 변경하였음.

- 인건비와 같은 운영비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 편성·집행해야 함에도 이처럼 세출예산 과목을 착오함으로써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정확한 세출 규모 분석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각종 근거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세출과목을 사업 성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하고, 정확히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

마. 주요 사업 검토

(1)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사업별설명서 25쪽>

- 노동자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서울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억 8천 3백만원 증가(211%)한 4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증액사유는 기존 노동자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한 ‘재취업 아카데미’ (2억 7백만원)를 신설하고, 노동자복지관 내에 위치했던 어린이집의 폐원(2021)에 따라 발생한 유휴공간(지상 및 지하 1층)을 재취업 아카데미 운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개보수비(1억원)와 교육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3천 2백만원)를 신규 편성했기 때문임.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34	417	283	■ 민간위탁금 285 ■ 민간위탁사업비 132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1992년부터 사용 중이던 현 시설⁵⁾의 노후화로 2024년까지 구(舊) 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부지⁶⁾로 이전할 계획임.

5)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 대지 1,320㎡, 연건평 3,768.24㎡(지하1층~지상6층)

6) 구로구 가마산로 272

- 이에 따라 재취업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하여 신규 편성된 시설개보수비용은 매몰비용이 될 우려가 있음.
- 또한 노동자복지관 이전 후에는 현 시설에 대한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으므로 조속히 활용용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2)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별설명서 35쪽>

- 노동법률 상담·교육, 노동기본권 확보,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종합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별, 자치구별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7억 4천 2백만원 감소 (△29.4%)한 65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9,329	6,588	△2,7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금 △113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29

- 서울시는 2019년부터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권역별센터”)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⁷⁾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구립 노동자종합 지원센터(이하 “구립센터”) 18개소를 선정하여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⁸⁾ 왔음.

7) 도심권과 동남권은 2019년 12월에 개소, 동북권과 서남권은 2021년 1월에 개소.

8) 자치구에서 센터 설치공간을 마련하면 시가 설치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며, 용산구센터의 개소 지연으로 2021년까지 건립이 완료된 구립센터 17개소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음.

- 2022년에는 권역별센터의 관리운영비(6백만원)와 사업비(219백만원) 지원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 1억 1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감액사유는 기존 센터별로 추진하던 홍보사업을 서울시가 통합함에 따라 홍보예산(3천 7백만원)이 감액되고, 실태조사 등 용역사업 4건(1억 8천 1백만원)은 기존에 외부용역을 통해 추진되던 사업을 민간위탁 기관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발주하도록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임.
- 이 밖에 17개 구립센터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인건비 8억 5천 5백만원, 사업비 17억 7천 5백만원 등 모두 26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서울시가 센터운영비를 시와 자치구가 재정분담(6:4)하도록 구청장협의회에 통보(2021.10.26.)함에 따라 자치구 재정분담액 만큼 감액되었음.
-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에 맞춰 설치·운영된 구립센터에 대해 자치구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안 제출시기에 임박하여 자치구 재정분담액을 통보한 점은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자치구분담금이 편성되지 않은 구립센터의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치구 추경을 전제로 한시적이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3)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40쪽>

- 광역 차원의 노동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1억 3천 8백만원 감소(△28.2%)한 28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3,830	4,030	2,892	△1,138	■ 민간위탁금	2,892

- 서울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는 2015년부터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 ▶노동기본권 보장 사업, ▶광역단위 노동허브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전태일기념관 5층) - 규 모 : 219.9㎡ - 위 탁 체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위탁기간 : '21. 1. 1. ~ '23.12.31.(3년) - 센터개소 : '15. 2. 24.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허브사업 : 서울노동포털 운영,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화 지원, 노동권익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 정책기획사업 :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노동자 참여플랫폼 구축과 운영, 휴서울노동자 쉼터운영 등 - 시민권익사업 : 노동자 법률 지원, 중소기업주 교육 및 컨설팅, 서울노동아카데미, 청소년 및 특성화고 노동권익 보호 등 - 운영지원사업 : 운영자문회의, 사업평가위원회 제도 운영 등

- 2022년 예산안은 인건비(65만원)와 일반관리비(3천만원)가 증액되었으며, 운영비 1억 5천 5백만원(△54.2%), 사업비 8억 1천 3백만원(△32.6%)이 각각 감액되었음.

<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서울노동권익센터 인건비 (23명) = 1,049	○ 서울노동권익센터 인건비 (23명) = 1,050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비 = 286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비 = 131
○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비 = 2,494	○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비 = 1,681
	○ 일반관리비 = 30

- 증액된 인건비는 기존에 운영비로 편성되던 4대 보험료, 퇴직충당금 등을 2022년부터 인건비에 편성한 것으로, 임금인상률이나 호봉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밖에 일반관리비는 기존에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수탁기관의 유지관리비용을 2022년부터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로 편성하면서 비목이 신설되었음.
- 이처럼 운영비와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이유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주요재정사업평가⁹⁾ 결과(미흡)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10% 의무삭감¹⁰⁾이

9)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사후평가로 2021년 서울시 주요재정사업평가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음.

적용되고, ▶타기관¹¹⁾과의 유사·중복사업 축소, ▶외부용역으로 수행 하던 정책연구를 센터가 직접 수행, ▶노동관련 기관 홍보사업의 서울시 통합 관리 추진, ▶간이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의 별도 예산 편성에 따른 것임.

-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노동자 지원시설을 확대하면서 시설별로 중복적인 사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있음.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과 교육·홍보, 사업장에 대한 지도권한이 부여되어 노동 분야의 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주요 노동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센터의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려움.

(4)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

〈사업별설명서 122쪽〉

- 업무상 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된 플랫폼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해 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천만원을 증가 (6.0%)한 26억 5천만원을 편성했음.

10)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 증액 또는 유지,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11) 권역별, 자치구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	2,500	2,65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120 ■ 보험금 2,5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

- 이 사업은 취약계층노동자 지원대책과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홍보(사무관리비 1억 2천만원)와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상해보험 단체가입(보험금 25억원),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천만원)으로 추진됨.
 - 사무관리비는 기존에 ‘노동존중특별시 홍보’ (7천만원)와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홍보(5천만원)를 이 사업에서 통합추진하게 됨에 따라 신설되었음.
 - 보험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¹²⁾ 중에서 배달업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골절 진단비, 상병수당 등을 보장하는 것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인 미만 택배노동자 근무시설(3개소)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보수 비용과 에어컨 등 비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음.

- 서울시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배달라이더 단체보험 가입을

¹²⁾ 만 16세 이상, 2만3000명~3만4000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자 공모를 추진(2021.8.)한 바 있음.

< 사업자 선정 공모 결과 >

- 공모내용 :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상해보험 운용
 - 사업예산(25억원) 범위 내 최적의 보장내역 제공 여부
 - 산출근거 : 필수보장(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 등)+서울시 만16세(이륜차 면허취득 최소연령) 이상자 중 유상운송 수행비율+사고위험률
 - 간소화된 청구절차 및 신속한 지급체계 구축여부 등 심사
- 공모내역
 - 1차 : 2021.8.24.~10.5.(보험대상 관련 금융감독원 협의)
 - 변경공고 : 10.15.~10.26.
 - 재공고 : 10.28.~11.9.(단독응찰에 따른 재공고)
- 공모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응찰업체 : DB손해보험 컨소시엄(삼성화재, 메리츠, KB손보, 한화손보)
- 계약일정 : 2021.12월 중 계약추진

- 그러나 보험대상자 변경¹³⁾,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로 인해 공모절차가 지연되어 올해 12월에야 계약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보험금은 사실상 2023년에야 집행이 가능하게 됨.
- 이 경우 「지방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올해 편성되었던 보험금의 집행여부를 확인한 후 2022년 예산편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한편,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나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지원은 가능하나 민간보험료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전에 조례상의 지출근거를 마련해야 함.

13) 보험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보험대상을 ‘서울 지역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에서 ‘서울시민 중에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로 변경했음.

(5)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신규)

<사업별설명서 124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골목창업 인턴십과 경진대회, 골목창업 아카데미 교육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가를 양성하고자 24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

(단위 : 백만원)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2,410	2,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220 ■ 기타보상금 83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위탁사업비 1,360

- 계속된 취업난 여파로 청년창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창업에 대한 지식, 경험 부족과 자금 조달 등의 진입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40~50대에 편중되어 있고,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지원에 치중돼 있어 청년과 골목상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청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골목상권과 연계된 실무 중심의 창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 ▶ 골목창업 사관학교(8억 3천 5백만원), ▶ 청년 골목창업 인턴십(5억 2천 5백만원), ▶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9억 8천만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 골목창업 사관학교는 기 조성한 상권혁신 아카데미¹⁴⁾를 활용하여 실무

중심의 창업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 창업희망청년 40명에게 제공하는 사업임.

- 청년 골목창업 인턴십은 창업희망청년 35명에게 최대 3개월간 분야별 성공사업가 사업장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와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는 청년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의 사업비를 창업희망청년 25팀에게 차등 지원하는 사업임.
- 자금부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장체험 기회를 제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소하는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함.
- 다만, 골목상권 대부분이 생활밀착업종(외식업, 카페, 베이커리 등)이라는 점에서 기술교육원(외식업, 베이커리, 바리스타)과 서울창업허브(키친인큐베이터),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등의 창업보육기관과 기능과 역할이 일부 중복되므로 차별화와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이 필요함.
- 또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출연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집행상황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먹거리 분야 등의 창업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업 목표가 달성

될 수 있을지 의문임.

- 특히,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¹⁵⁾에도 불구하고, 팀당 최대 5천만원에 달하는 창업자금(8억 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함.
- 한편, 이 사업과 유사한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던 ‘청년몰’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과 먹거리에 편중된 콘텐츠, 중장기적 지원정책 부재로 평균 폐업률이 42.1%에 달하고 있으므로 청년몰의 실패 사례를 감안하여 보다 세밀한 청년 창업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6)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135쪽〉

-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도모하는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 재단은 공공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이 담보되어야 함.

15)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80

- 2022년 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640억 9천만원 감액(△52.8%)된 574억원으로, ▶ 신용보증을 위한 재원 출연 570억, ▶ 보증료재원 4억원임.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1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x-) 11,860	(x1,330) 121,490	(x-) 57,400	(x△1,330) △64,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 57,400 - 신용보증재원 57,000 - 보증료재원 400

- 보증료재원 4억원은 재단에서 수탁하고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중 서울형 다시서기 3.0프로젝트¹⁶⁾에서 재창업 기업 지원을 위해 400명에게 보증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임.
- 한편, 폐업사업자 보증(브릿지보증)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되면서 출연금에 계상되지 않았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브릿지보증)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1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x-) -	(x8,000) 32,000	(x-) -	(x△8,000) △3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브릿지보증) 32,000

- 최근 5년간 재단의 출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서울시 출연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확대에 따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16) 성실실패자에 대한 채권소각, 교육 및 컨설팅, 보증지원, 사후관리의 종합적 지원으로 실질적 재기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시범사업을 통해 2022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올해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4무 안심금융’ 등 소상공인 등의 경영위기 극복을 돕고 있음.

< 최근 5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추정)	2022년(예상)
보증공급액	13,372	18,780	51,249	38,000	20,000
(A) 보증잔액	37,971	42,377	79,313	102,313	99,313
연간 출연금 조성액	397	633	2,302	1,790	1,170
서울시	48	66	810	809	570
정 부	-	-	102	41	-
자치구	4	3	146	300	50
금융회사 법정출연	43	41	50	80	80
금융회사 등 협약출연	302	523	1,194	560	470
당기순손실	228	397	926	1,142	1,60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	2	-	-	-
(B) 기본재산	6,150	6,388	7,764	8,412	7,980
운용배수=(A/B)	6.17	6.63	10.21	12.16	12.44

- 2022년 출연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 보증공급(2조원 규모)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12.5배) 유지를 위해 신용보증재원 570억원을 편성하였음.
-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80%¹⁷⁾대에 진입하고 있고,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4천명대를 넘어서면서 다시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음.

17) 전체 인구대비 백신 접종률 - 접종완료 79.1%, 1차접종 82.4% (2021.11.24. 기준)

- 또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 수준으로 인상하고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매출감소와 자금조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주체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강화와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 수행을 위해서는 법적 보증한도(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출연 동의안과 실제 편성액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의회동의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 2021년 출연 동의안에서는 763억원으로 제출했으나 실제 예산편성은 118억 6천만원에 그쳤고, 2022년은 630억원의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 예산 편성은 574억원에 그침.
- 한편, 재단은 서울시민의 생활방식과 소비패턴 변화, 유통구조의 혁신에 맞춰 생계형 창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정교한 상권분석을 위해 2019년 6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를 신설하였음.
 - 센터장을 포함한 19명(개방형 9명, 정규직 10명),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38건의 정책 및 상권연구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센터는 그동안 매년 출연금 중 일정금액을 운영비로 편성¹⁸⁾했으나, 2022년 예산안에는 이를 분리하지 않고 출연금에 포괄 편성하여 예산의 가시성을 낮추고, 의회의 예산 심의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최근 3년간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2021.10.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총 액	820	697	2,080	2,010	2,260	1,470
인건비	320	209	1,360	1,162	1,740	934
경비	500	488	720	848	520	536

(7)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신규)

〈사업별설명서 139쪽〉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맞춤형 지원전략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62억 2천 2백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 >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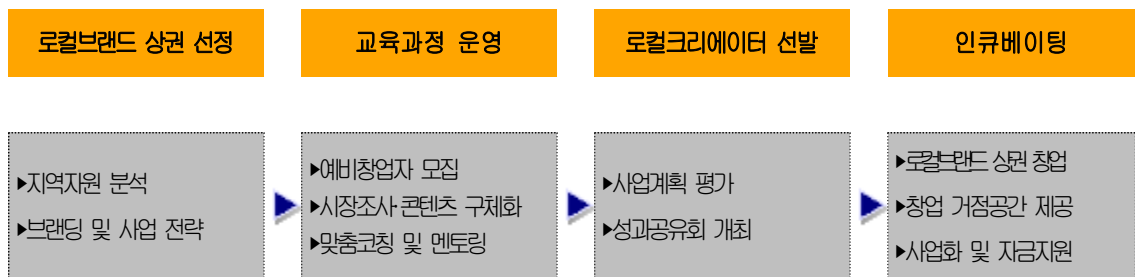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6,222	6,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51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712

- 사무관리비는 골목상권 실태조사(5천만원),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창업지원(4억원),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및 지원(5천만원), 자문위원회 운영(1천만원)로 구성되었음.

18) 2019년 - 8억 2천만원, 2020년 - 20억 8천만원, 2021년 - 22억 6천만원.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상권네트워크 구성(3억 3천 6백만원), ▶상권활성화 사업(24억 2천 6백만원), ▶상권환경 조성(23억 5천만원), ▶로컬브랜드 상권 운영·지원비(6억원)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로컬브랜드 촉진지구 조성’, ‘로컬브랜드 강화지구 육성’ 으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로컬크리에이터 100명, 로컬브랜드 촉진지구 10개, 로컬브랜드 강화지구 2개를 각각 선정·지원할 예정입니다.
- 로컬브랜드 상권 선정 이후 로컬크리에이터¹⁹⁾를 위한 상권별 전문 과정을 운영하고, 사업화, 창업자금·공간 등을 지원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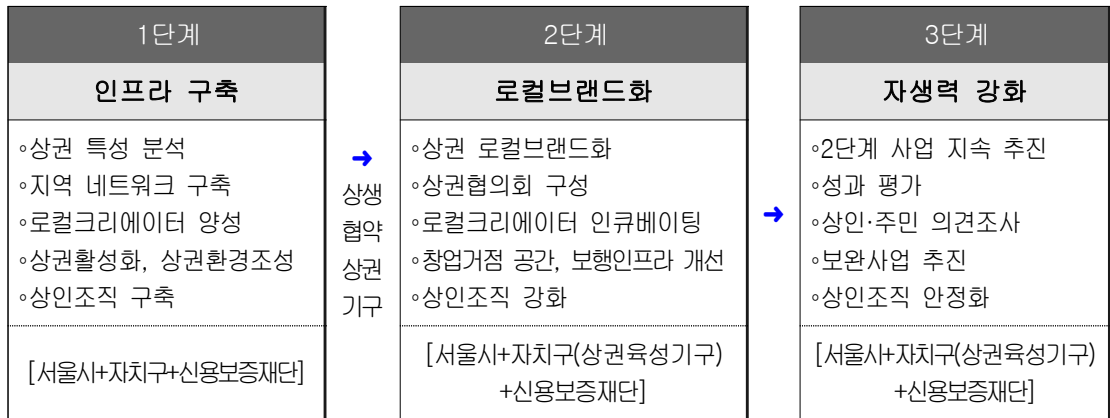
<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절차 >



- 로컬브랜드 촉진지구 조성은 위촉된 골목상권 중에 지역성과 문화 자원 등 로컬콘텐츠를 보유한 잠재성이 높은 상권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인프라 구축, 로컬브랜드화, 자생력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¹⁹⁾ 지역적 환경,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비즈니스 사업화하려는 골목 창업가

< 로컬브랜드 촉진지구 조성 절차 >



- 로컬브랜드 강화지구는 가로수길, 경리단길과 같이 높은 인지도와 집객효과, 관광콘텐츠가 있는 상권을 공모·선정하여 3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게 됨.
- 골목상권을 활용하여 창업을 장려하고 해당 상권에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부터 연간 88억원의 규모로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는 ‘생활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종합지원’ 등 골목상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기존 사업과의 중복우려가 있음.

(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390쪽>

-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0억 2천 6백만원 감액(△48.9%)한 31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x209) 6,185	(x-) 3,159	(x△209) 3,026	■ 민간위탁금 3,159

- 2013년 설립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과 연구, 경영지원과 판로지원, 인재양성 등 서울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개요 >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內 미래청 1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공유 오피스, 공동 교육장, 사회적경제 매장 등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탁기관 :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위탁기간 : 2021.1.23.~2024.1.22.(최초위탁 2013.1.23.)
- 운영인력 : 총 24명
- 기능 및 역할
 - 사회적경제 주체양성,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기업간 협력 지원·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지원(컨설팅 등), 판로지원

- 2022년 예산안에서는 인건비 9천만원(△6.8%), 운영비 3천 6백만원(△10.0%),

사업비 28억 9천 9백만원(△64.4%)이 각각 감액되었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건비(24명) = 1,322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건비(24명) = 1,232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 360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 324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 = 4,503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 = 1,604

- 인건비는 최근 2년 평균 인건비 집행액(12억 2천 8백만원)을 기준으로 감액 편성했으며, 운영비는 인건비와 연동된 4대 보험료와 사업비와 연동된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감액되었음.
- 그러나 인건비는 정원과 직급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원의 퇴사나 휴직 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는 집행액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면 퇴사자나 휴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부족해 질 우려가 있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보기 어려움.
- 사업비는 ▶ 유사·중복사무 통·폐합,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공모사업(보조금사업) 폐지²⁰⁾, ▶ 서울시 별도 예산 편성(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사업) 등의 사유로 감액되었음.

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 세부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1년 사업비		2022년 사업비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합 계	4,503	합 계	1,604
사회적경제 민간 판로 및 유통 지원	550	사회적경제 민간 판로 및 유통 지원 (공공시장 확대 지원과 통합)	482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확대지원	190		
공공구매 쇼핑몰 사업	505	온라인 쇼핑몰 운영	476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운영	410	공간 운영	370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해외연수	140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40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	150	시민소통 및 국제협력	103
-	-	투자유치 및 경영지원(신설사업)	133
자조기반 성장 촉진	100	(사업폐지)	-
전략사업개발(업종협업사업)	640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지원	1,250		
기획연구	150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418	(시 직접 수행)	-

- 세부사업별 감액내역은 ▶ 민간 판로 및 유통지원(공공시장 확대 지원 포함) 2억 5천 8백만원(△34.9%), ▶ 온라인 쇼핑몰 운영 2천 9백만원(△5.7%), ▶ 공간 운영 4천만원(△9.8%), ▶ 인재양성 4천만원(△71.4%), ▶ 시민소통 및 국제협력 4천 7백만원(△31.3%)임.

-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던 ▶ 전략사업개발(업종협업사업),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지원, ▶ 자조기반 성장 촉진 사업과 외부용역을 통해 추진되던 기획연구는 전액 삭감되었고,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 및 경영지원’ 이 신설되었음.

- 민간위탁금으로 공모사업(보조금사업)을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공모사업들에 대한 서울시 직접 추진 등의 방안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채, 매년 편성되고 있던 사업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그동안 서울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 하던 사경센터의 역할이 경영지원과 판로개척으로 제한되고 있는 바,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기능의 약화가 우려됨.

(9)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별설명서 354쪽>

- 공동주택 단지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발굴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하여 지역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4천 9백만원이 감액된 4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했음.
- 공동주택단지 지원규모 축소(18개소→6개소)에 따라 광역지원단 운영 용역비(2억 4백만원)와 사업비(6억 4천 5백만원)을 감액함.

<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295	446	△849	■ 사무관리비 146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

- 이 사업은 2018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9개 단지) 운영 후, 2019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42개의 단지가 사업에 참여하였음.
- 사업추진은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단지 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2단계는 공동 생산·소비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도약하고, ▶3단계는 공동 생산·소비로 산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구조임.

공동체 형성 및 가치공유 (1단계)	공동소비·공동생산의 경제공동체 형성 (2단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자조모임(협의체) 운영 · 사업 공급자 및 수요자 발굴 위한 한마당 등 행사 · 공동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운영 위한 사업 지원 · 단지내 유휴공간 등 활용 사업장 조성 및 장비임차 등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시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브랜드 개발, 지역 특화 사업 등 복합 서비스 개발 ·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추가 연계사업 발굴로 사회 문제 해결 확산
최대 60백만원	최대 60백만원	최대 60백만원

- 그러나 2021년 현재 12개 아파트 단지(1단계 : 4개소, 2단계 : 6개소, 3단계 : 2개소)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임.
- 이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2단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3단계)하는 것이지만, 사업에 참여한 단지의 대부분이

돌봄이나 교육·먹거리 분야에 집중하여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었음.

-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 주민의 인식부족이나 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지원 사업’으로 사업목적을 오인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다음 단계로의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신규 사업단지가 선정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다시 추가 사업 단지를 선정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확대를 진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가 사업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에는 기선정된 단지를 중심으로 단계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3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진입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동주택단지에 적합한 사회적경제기업 업종과 분야를 파악하고 집중 지원해야 할 것임.

(10) 서울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2건)

·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사업별설명서, 252쪽)
· 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사업별설명서, 256쪽)

-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636억 3천 1백만원(△65.3%)이 감소한 33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역 상품권에 대한 할인보전금 255억원과, 광역 상품권에 대한 사무 관리비로 11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예산(안)	증 감
	본예산	최종예산		
계	(x-) 25,616	(x30,560) 97,401	(x5,600) 33,770	(△x24,960) △63,631
광역 상품권 (사무관리비)	(x-) 116	(x-) 116	(x-) 11,310	(x-) 11,194
지역 상품권 (지치단체경상보조)	(x-) 25,500	(x30,560) 97,285	(x5,600) 22,460	(△x24,960) △74,825

- 내년 상품권의 발행규모는 4천 2백억원(광역 1,400억원, 지역 2,800억원)으로, 올해(1조 816억원) 대비 61.1%가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금 감소(△77.2%)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은 적은 편임.
- 국고보조금 규모는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내년 2,400억원으로 77.2%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지역 상품권의 규모도 대폭 축소되었음.
- 당초 정부는 서울시의 높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상품권 할인보전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자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음.

-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²¹⁾· 부정적²²⁾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상품권 발행비용대비 소비진작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ㄱ) 지역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규모 감소에 따라 지역 상품권 사업을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48억 2천 5백만원(△76.9%)이 감소한 22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0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x-) 25,500	(x30,560) 97,285	(x5,600) 22,460	(△x24,960) △74,825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지원22,460

- 올해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3천 9백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2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1조 8백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음.

21)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음” - (‘조세연구원 지역화폐 보고서’ 비판 입장문, 경기연구원 2020.09.)

2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 등 부작용만 남게 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2020.9.15.)

< 2021년 예산 변경 내역 및 발행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2021년 예산	(x-) 25,500	(x25,560) 75,015	(x30,560) 97,285
증감	-	(x25,560) 49,515	(x5,000) 22,270
상품권 발행규모	837,100		244,500

- 다만, 기존에 발행·판매된 상품권의 발행대비 누적결제율이 73.8%²³⁾에 불과하므로 소상공인의 단기간 매출확대와 선순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간별 할인율 차등화나페이백의 확대 등 별도의 인센티브²⁴⁾정책이 필요함.

(나) 광역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 국고보조금 규모 감소에 따라 대폭 축소되는 지역 상품권의 총 규모를 늘리고자, 광역 상품권 발행을 전액 시비로 111억 9천 4백만원(9,650%)이 증가한 11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1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116	*116	11,310	11,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판매 수수료 지급 110 ■ 광역상품권 할인보전금 지원 9,800 ■ 광역상품권 발행수수료 지원 9,800

* 전액 법인판매분

23) 누적발행액 : 1조 6,326억원, 누적결제액 : 1조 2,050억 7천 7백만원(2021.10월말 현재)

24) 올해 초에 발행된 '홍걸제서울사랑상품권'은 행사기간 한정 10%페이백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여 발행대비 결제율이 99%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음.

- 광역 상품권은 지역 제한없이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기존 법인판매분에 일반분을 추가한 것으로, 지난 7월 진행된 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관내 이용제한’에 대한 불편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임.
- 서울시의 기존 상품권은 자치구 발행으로 관할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5.9%²⁵⁾에 달하는 시민이 불편함을 겪어 왔으며,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는 상품권을 자체 발행해 왔음.
- 사용처를 광역으로 확대하면 관외 소비지출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보호, 가계지출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내년 상품권의 총 규모가 감소한데 비해 법인판매분은 올해와 같은 100억원 규모로 책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민의 혜택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II)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업별설명서 271쪽)

-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불공정 피해 상담, 피해구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5%(6천 7백만원) 증액된 2억 5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25) ‘서울사랑상품권 여론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서울특별시, 2021.07.)

- 증액 이유는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인력(1명, 10월분) 보수 2천 7백만원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지원인력(4명, 5개월분) 5천 4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 >

(단위 : 백만원)

2021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90	258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81 ■ 사무관리비 177

- 공정거래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는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를 불공정거래 피해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해 상담 또는 권익구제 절차를 지원하는 곳으로, 지난 2019년 기존 불공정거래지원센터를 개편하여 운영되고 있음.
-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은 평균 128건이며 이 중 123건이 처리됐으며 성립은 44건, 불성립이 9건, 종결(각하, 취하, 소제기 등)이 70건이었음.

< 분쟁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단위 : 건, %, 2020.12.31.기준)

연도	구분	접수	처리 현황 및 유형				성립률 (A/(A+B))
			계 (A+B+C)	성립(A)	불성립(B)	종 결(C)	
2020년	계	128	123	44	9	70	83
	가 맹	109	108	44	8	56	85
	대리점	19	15	-	1	14	0
2019년	계	103	90	34	5	51	87

	가맹	89	76	31	4	41	89
	대리점	14	14	3	1	10	75
총계	계	231	213	78	14	121	85
	가맹	198	184	75	12	97	86
	대리점	33	29	3	2	24	60

- 한편,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인력은 올해까지는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여성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통해 운영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임.
- 그러나 공정거래지원센터 기본급(2,107,138원)이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0,766원/월급 2,250,094원)보다 낮게 책정되었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정거래지원센터 인력이 10개월 근무형태의 기간제 근로자여서 사업의 지속성과 고용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우려됨.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2020.11.19)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제2장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기금

I. 기금 총괄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022년 총 운용규모는 3,728억 5천 3백만원이며 전년대비 10.7%(△444억 9천 6백만원만원) 감소하였음.

<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안)	2021년도	증 감	증감율
계	372,853	417,349	△44,496	△10.7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356,243	385,800	△29,557	△7.7
사 회 투 자 기 금	16,610	31,549	△14,939	△47.3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운용규모는 3,562억 4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5억 5천 7백만원(△7.7%) 감소했음.
 - 사회투자기금의 운용규모는 166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49억 3천 9백만원(△47.3%) 감소했음.
-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61억 3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8.6%(△654억 5천 5백만원) 감소하였음.

<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기금 조성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말 조성액(A)	2022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계	111,592	261,261	326,717	△65,455	46,137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06,058	250,185	313,657	△63,471	42,587
사회투자기금	5,534	11,076	13,060	△1,984	3,550

※ 조성계획은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 지출에서 예치금이 제외된 수치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조성액은 전년대비 634억 7천 1백만원 (△59.8%) 감소한 425억 8천 7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19억 8천 4백만원(△35.8%) 감소한 35억 5천만원임.

- 두 기금은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큰 구조로 설계·운영됨에 따라 해마다 조성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2021년 코로나19 피해지원 용자로 지출이 대폭 확대되었고 그 추세가 20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기금 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II.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1. 개요

가. 수입계획안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이하 “중기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3,562억 4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5억 5천 7백만원(△7.7%)이 감소하였음.
- 수입내역은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44억 7천 6백만원, ▶ 용자금 회수 수입(이자포함) 2,127억 9백만원, ▶ 예치금 회수 1,060억 5천 8백만원, ▶ 이자수입 30억원임.

< 2022년도 중기기금 수입 계획안 >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항 목	2022년	2021년	증 감
합 계	356,243	385,800	△29,557
전 입 금	34,476	27,300	7,176
용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212,709	200,923	11,786
예 치 금 회 수	106,058	152,577	△46,519
예 수 금	-	2,000	△2,000
이 자 수 입	3,000	3,000	-

나. 지출계획안

- 지출계획은 ▶ 용자성사업비 2천억원, ▶ 비용자성사업비 1,109억 1백만원,

▶ 예치금 425억 8천 7백만원, ▶ 기본경비 5백만원, ▶ 예수금원리금상환 27억 5천만원임.

< 2022년도 중기기금 지출 계획안 >

(단위 : 백만원)

지 출 계 획			
항 목	2022년	2021년	증 감
합 계	356,243	385,800	△29,557
용 자 성 사 업 비	200,000	200,000	-
비 용 자 성 사 업 비	110,901	77,109	33,792
예 치 금	42,587	106,058	△63,471
기 본 경 비	5	5	-
예 수 금 상 환 원 리 금 상 환	2,750	2,628	122

- 용자성사업비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2.0~2.3%의 금리로 직접 용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천억원이 편성되었음.
- 비용자성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37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에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통한 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이 증가한데 기인함.

2. 검토의견

가. 기금 조성 현황

-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용자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2018년부터는 용자

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음²⁶⁾.

- 중기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됨.
- 2022년도 말 중기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634억 7천 1백만원(△59.8%) 감소한 425억 8천 7백만원임.

< 2022년도 중기기금 조성계획 >

(단위 : 백만원)

2021년도 말 조성액(A)	2022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106,058	250,185	313,657	△63,471	42,587

※ 조성계획은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 지출에서 예치금이 제외된 수치임

- 2022년도 말 중기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연도말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8,506억 6천 5백만원을 포함한 8,932억 5천 2백만원임.

< 2022년도 중기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 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총 조성규모
42,587	850,665	893,252

- 중기기금의 총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8,602억 1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 2,400억원, 기금운용손실 2,986억 6천 2백만원을 포함하여 8,015억 4천 8백만원임.

26)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계정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투자계정은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소관임.

< 중기기금 운용 수익현황 >

(2021년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기금총액	일반회계 출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기금운용수익
801,548	860,210	240,000	△298,662

- 중기기금의 운용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기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와 다각적인 수입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상환금 및 상환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상환잔액	218,000	218,000	238,000	238,000	240,000
원금상환	-	-	-	-	-
이자상환	2,398	2,398	2,618	2,618	2,628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탁(수)약정에 의거 약정이율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2019년 200억원, 2021년 20억원을 추가로 융자받음

나. 주요 사업

- 중기기금의 2022년도 사업비는 총 3,109억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7억 9천 2백만원 증가(12.2%)하였음.
- 중소기업 직접 융자금 2,000억원 외에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087억 7천 6백만원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억 1천 6백만원,

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비 6억 7백만원,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13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사업비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안)	2021년	증 감
사업비 합계	310,901	277,109	33,792
융자성 사업비	200,000	200,000	-
중소기업 직접융자	200,000	200,000	-
비용자성사업비	110,901	77,109	33,792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이차보전금)	108,776	74,149	34,627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16	190	26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607	607	0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1,302	2,163	△861

- 2022년에는 중기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합친 “중소기업육성자금” 을 전년보다 1조 5,000억원 감소한 2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기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직접융자금(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2.0~2.3%)과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0.8~2.3%)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

(2021년 10월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안)	
총 지원규모	17,000	24,050	35,000	20,000	
기금 직접융자금	계 획	3,000	2,650	2,000	2,000
	실 적	2,516	2,464	1,684	-
시중은행협력자금	계 획	14,000	21,400	8,000	18,000
	실 적	13,563	21,106	33,222	-

- 2021년은 코로나19 민생회복 대책으로 4무 안심보증²⁷⁾이 실시되면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전년대비 1조 950억원 증가)되었으며, 10월 말 현재 소상공인에게 12만 8,943건, 3조 4,906억원(계획 대비 99.7%)을 융자하였음[참고자료].
-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회복 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57.1%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편성으로 보기 어려움.
- 한편 시중은행협력자금의 확대는 원금 회수 없는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출 확대로 중기기금을 소진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²⁷⁾,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이차보전금 지출 실적 >

(2021년 10월 기준, 단위 : 억원)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안)
이차보전금	326	336	453	741(예정)	1,088

- 이 밖에 성장기반자금, 기술형기반도약자금,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의 2021년도 융자실행률은 각각 57.0%, 35.8%, 42.4%로, 실적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2022년도에는 지원 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²⁷⁾ 4~5년의 융자기간 동안 대출실행액에 대한 이차차액을 보전하는 형태로, 지원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금은 증가하였음.

- 중기기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바,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참고자료]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세부 계획 및 실적

(2021 10월말 기준, 단위 : 건, 억원, %)

구 분	계 획 (A)	용자추천			용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합 계	35,000	130,514	35,386	101.1%	128,943	34,906	99.7%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	4,133	1,790	89.5%	3,920	1,684	84.2%
시설자금	50	11	50	100.0%	14	41	81.7%
경영안정자금	1,950	4,122	1,740	89.2%	3,906	1,643	84.3%
성장기반자금	300	325	225	75.1%	217	171	57.0%
기술형기업도약자금	50	32	22	44.3%	29	18	35.8%
긴급자영업자금	500	1,899	496	99.2%	1,825	476	95.3%
코로나19피해기업자금(기금)	1,000	1,866	997	99.7%	1,835	978	97.8%
재해중소기업자금	-	-	-	-	-	-	-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33,000	126,381	33,596	101.8%	125,023	33,222	100.7%
일반자금	12,650	47,546	13,696	108.3%	46,668	13,434	106.2%
코로나19 일반경제활성화 경제 활성화	7,000	11,104	3,299	103.0%	11,036	3,276	102.2%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13,386	3,911		13,277	3,878	
코로나19민생안정	5,000	20,742	5,836	116.7%	19,916	5,596	111.9%
창업 기업 자금	500	137	50	100.0%	134	49	99.1%
컨설팅기반창업 일반창업		1,941	450		1,923	447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50	236	150	99.9%	234	148	98.9%
신종코로나피해기업자금	-	-	-	-	5	1	-
집합제한업종특별자금 (경제활성화)	-	-	-	-	143	39	-
특별자금	20,350	78,835	19,900	97.8%	78,355	19,788	97.2%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 기업자금	100	14	10	100.0%	14	10	100.0%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157	90		157	90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614	200	100.0%	614	200	99.9%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50	111	23	45.5%	102	21	42.4%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일반)	15,000	50,910	14,364	97.3%	50,642	14,291	96.6%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중저신용)		1,303	230		1,154	203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자치구)	5,000	25,726	4,983	99.7%	25,669	4,972	99.5%
서울형 이자비용절감 대환자금	-	-	-	-	3	1	-

Ⅲ. 사회투자기금

1. 개요

가. 수입계획안

- 2022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지출규모는 전년대비 149억 3천 9백만원(△47.4%) 감소한 166억 1천만원임.
- 수입은 ▶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자포함) 109억 1천 5백만원, ▶ 예치금 회수 55억 3천 4백만원, ▶ 이자수입 6천 1백만원, ▶ 기타 수입 1억원임.

< 2022년도 사회투자기금 수입 계획안 >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항 목		2022년	2021년	증 감
합	계	16,610	31,549	△14,939
전	입	0	8,500	△8,500
융	자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포	함			
)		10,915	7,142	3,773
예	치			
금	회			
수		5,534	15,742	△10,208
이	자			
수	입	61	65	△4
기	타			
수	입	100	100	-

가. 지출계획안

- 지출은 ▶ 융자성사업비 120억원, ▶ 비융자성사업비 10억 4천만원, ▶ 기본경비 2천만원, ▶ 예치금 35억 5천만원임.

< 2022년도 사회투자기금 지출 계획안 >

(단위 : 백만원)

지 출 계 획			
항 목	2022년	2021년	증 감
합 계	16,610	31,549	△14,939
비용자성사업비	1,040	2,495	△1,455
용자성사업비	12,000	23,500	△11,500
기본경비	20	20	-
예치금	3,550	5,534	△1,984

- 용자성사업비는 사회적경제기업 용자금 110억원(△5억원), 고용취약 계층노동자 용자금 10억원(△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주택 용자와 민간자산클러스터 용자는 전액 감액되었음.

- 비용자성사업비는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2억 4천만원(△1억 1천만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4억 7천만원(△3천만원), ▶ 채권 및 기타관리비 3억 3천만원, ▶ 기금관리비 2억원이며, 전년도에 6억원이 편성되었던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은 전액 감액되었음.

- 기본경비는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위한 비용(2천만원)임.

2. 검토의견

가. 기금 조성 현황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 프로젝트, 사회주택 등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12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이하 “사투기금”)을 조성·운용 중임.

- 사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기부금 등 기타수입을 재원으로 조성됨.
- 2022년도 말 사투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대비 19억 8천 4백만원 감소한 35억 5천만원임.

< 2022년도 사회투자기금 조성계획안 >

(단위 : 백만원)

2021년도 말 조성액(A)	2022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5,534	11,076	13,060	△1,984	3,550

※ 조성계획은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 지출에서 예치금이 제외된 수치임

- 2022년도 사투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623억 9천 5백만원을 포함한 659억 4천 5백만원임.

< 2022년도 사회투자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 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총 조성규모
3,550	62,395	65,945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융자사업이 주목적인 사투기금은 수입대비 지출이 큰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회수기간의 도래와 사회주택

지원 사업의 종료로 이유로 2022년에는 서울시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아 기금운용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해짐²⁸⁾.

< 사회투자기금 연도말 조성액 및 서울시 전입금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도말 조성액	8,881	13,217	4,347	5,534	3,550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2,600	15,600	8,800	8,500	-
사회적경제담당관	-	13,000	7,000	7,000	-
주택공급과	2,600	2,600	1,800	1,500	-

- 다만, 2021년 사투기금 사업비의 집행률이 66.8%(173억 6천 9백만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기금운용규모의 축소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3년간 사회투자기금 사업비 대비 집행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집행액 (A)	사업비(B)		집행률 (A/B)*100	
		당초	최종	당초	최종
2019	17,670	21,850	22,470	80.9%	78.6%
2020	23,868	21,450	25,472	111.2%	93.7%
2021	17,369	19,280	25,995	90.1%	66.8%

※ 기금집행액, 사업비는 예치금 제외

- 2021년 10월 기준 채권잔액은 673억 8천 4백만원이며 융자원금 상환율은

28) 서울시는 주택정책실의 사회투자기금 전출금도 미편성됨에 따라 추가적인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힘.

82.6% 수준으로 나타나 2019년 이후 원금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채권 잔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12.	2019.12.	2020.12.	2021.10.
전년도 채권 이월액(A)	41,335	48,691	59,438	64,605
당해연도 융자금(B)	13,066	16,350	22,020	16,000
당해연도 원금상환액(C)	5,711	5,602	16,854	13,221
채권잔액(A+B-C)	48,691	59,438	64,605	67,384
융자금 대비 원금상환율(B/C)	43.7	34.3	76.5	82.6

- 다만, 최근 2년간 융자기업의 경영악화와 폐업으로 인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융자심사를 통해 사고채권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임.

< 사회투자기금 미회수채권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채권명	미회수채권액*	회수예정일	미수원인	비율**
2019년 말	북티크	27	2019.01.27.	경영악화	1.18%
2020년 말	네오엑세스	87	2020.10.23.	법인폐업	
	오르그닷	111	2020.05.15.	법인폐업	
	협동조합온리	78	2020.04.25.	경영악화	
	한국택시협동조합	497	2020.10.26.	경영악화	
2021년 10월	-	-	-	-	

* 미회수채권 : 회수예정일이 도래하였으나 미회수된 채권이며 현재 채권추심 진행중임

** 비율 : 미회수채권액/채권잔액(2021.10월말 기준)×100

나. 주요 사업

- 사투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하는 ‘융자성 사업비’와 사회적 금융기관 지원과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등의 ‘비용자성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 2022년 사회투자기금 사업비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안)	2021년	증감
사업비 합계	13,040	19,280	△6,240
융자성 사업비	12,000	17,500	△5,500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11,000	11,000	△500
사회주택 융자	-	1,500	△1,500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	2,000	△2,000
고용취약노동자 융자	1,000	2,500	△1,500
비용자성사업비	1,040	1,780	△740
임팩트투자펀드조합 출자금	-	600	△600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240	350	△110
이차보전금 지원	470	500	△30
채권 및 기타관리비	330	330	-

(1) 융자성 사업

- 융자사업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무이자로 융자(상환기간 최대 5년, 최대 30억원)하고, 기금과 5:1~1:1(사:민간)의 매칭을 통해 자금을 확대 조성한 후 사회적경제기업에 재 융자하고 있음.
- 2022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110억원(△5억원), 고용취약노동자 융자 10억원(△15억원)이 편성되었고, 사회주택 융자(△15억원)와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클러스터 조성 용자(△20억원)는 전액 감액되었음.

- 사회적경제기업 용자와 고용취약노동자 용자의 감액분은 서울시 기금 전출금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임.
- 사회주택 용자는 잦은 상환유예 발생과 주택정책실의 사회주택 사업 중단으로 전액 감액되었고, 민간자산클러스터 용자는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용자 상환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미편성되었음.
- 사회적기업 용자는 수행기관 자금을 통해 연 3% 이내 금리, 최대 3억원, 최대 5년의 상환조건으로 채용자되며, 현재까지 총 1,481억 5천 5백만원의 자금으로 998개의 사회적기업과 409명의 고용취약계층노동자를 지원하였음.

< 사회투자기금 연도별 지원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0	
용 자 금 액	합 계	148,155	21,123	9,348	15,954	21,331	16,865	13,942	17,519	23,667	8,406
	市기금	114,038	10,900	7,488	14,612	20,664	12,350	9,916	12,369	18,734	7,005
	민간기금	34,117	10,223	1,860	1,342	667	4,515	4,026	5,150	4,933	1,401
지 원 건 수	기 업 (단위 건)	998	59	44	81	65	167	168	111	253	50
	개 인 (단위 명)	409	-	-	-	-	-	-	-	321	88

- 한편, 2021년 사투기금의 용자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175억원) 대비 91%인 160억원이 용자되었으나, 채용자실적은 총 조성비 192억원 대비 43.8%(84억 6백만원)에 그치고 있어, 용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됨.

< 2021년 용자사업 수행기관 채용자내역 >

(2021년 10월 기준, 단위 : 개, 명, 백만원)

수행기관	시 용자금	수행기관 매칭자금	총사업비	채용자 대상 수	채용자 비용
합 계	16,000	3200	19,200	140	8,406
소셜하우징 용자	1,500	300	1,800	1	250
나눔과미래	1,500	300	1,800	1	250
사회적경제기업 용자	11,000	2,200	13,200	50	5,102
(재)밴드	4,050	810	4,860	11	456
(사)한국의이코노미크레디트신나는조합	2800	560	3,360	14	1,730
신목신용협동조합	1000	200	1,200	7	480
(재)한국사회투자	900	180	1,080	6	1,000
한국사회혁신금융(주)	250	50	300	4	220
동작신용협동조합	2,000	400	2,400	8	1,216
고용취약노동자 용자	1,000	200	1,200	88	694
(재)밴드	1,000	200	1,200	88	694
민간자산클러스터 용자	2,500	500	3,000	1	2360
은평신용협동조합	2,500	500	3,000	1	2360

-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등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²⁹⁾될 가능성이 높고,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초 제조업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확대와 용자요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 출자금을 증액하여 기금운용의 신축성과 대응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비용자성 사업

- 비용자성사업비는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2억 4천만원(△1억 1천만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4억 7천만원(△3천만원), ▶ 채권 및 기타관리비 3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6억원)은 전액 감액되었음.

29)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2021.11.)', p.1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은 용자사업비의 2% 범위에서 수행기관의 채용자기업 대상 컨설팅 비용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6개 수행기관에 3억 2천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22년에는 용자사업비의 감소로 인해 사업비가 감소하였음.
- 이차보전금 지원은 용자사업비의 2.5% 범위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용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251개 기업에 대해 1억 5천 2백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22년에는 용자사업비의 감소로 사업비가 감소하였음.
- 채권 및 기타관리비는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및 관리(2억 5천만원), 채권상환관리 전문기관 용역(2천만원)과 채권관리 수수료(6천만원)임.
-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금융 투자 생태계를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투자 조합을 조성하기 위해 시의회의 출자 동의³⁰⁾를 받아 2021년까지 제1호 부터 제3호 투자조합에 출자했음.

< 서울시 출자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개요 >

구 분	1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2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3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조합명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비하이 임팩트투자조합 1호	비하이 임팩트투자조합 2호
운용사	다담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조성시기	2018년 11월	2019년 9월	2020년 11월
조성규모	145억원 - 서울시 10억원 - 한국벤처투자도태펀드 100억원 - 대전시 10억원 등	150억원 - 서울시 10억원 - 한국벤처투자도태펀드 105억원 - 우리은행 20억원 등	300억원 - 서울시 10억원 - 한국벤처투자도태펀드 120억원 - 군인명예회 100억원 등

30)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 동의안」 (2018.4.13.의결)

구분	1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2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3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존속기간	8년	8년	8년
투자현황	16개 기업, 111.5억원 (서울시 내 6개 기업, 49억원)	13개 기업, 123.4억원 (서울시 내 4개 기업, 48.5억원)	7개 기업, 105억원 (서울시 내 3개 기업, 50억원)

※ 각 조합별로 서울시 출자금의 200%(20억원)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함.

- 투자조합 조성 시 출자금 일부만 우선 납입하고 초기 조성금액이 소진 되면 추가 납입하는 구조로 운용되며, 2020년 2억원, 2021년에 6억원을 납입하고 2022년에는 2억원을 추가로 납입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추가출자를 시행할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에는 출자금을 포함하지 않았음.
- 기일 내에 출자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출자동의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불필요한 기금지출을 방지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8
김태훈	02-2180-8063